전북도, 한·미 FTA 포도·블루베리 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 규모 확정

폐업지원 규모 1391ha에 422억원

피해보전직불제 1103ha에 65억원… 경북 이어 전국 2위… 지원금 올해 75%·내년 25% 지급 계획

전북도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를 입은 포도와 블루베리의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규모를 확정했다.

전북도는 폐업지원 규모가 1391ha에 422억여 원이라고 7일 밝혔다.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한 품목의 가격 하락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피해보전직불제는 1103ha에 65억여 원에 해당한다.

또 FTA 협정으로 재배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지원하는 폐업지원사업은 287ha에 357억여 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사업 면적과 금액은 경북도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도내 블루베리 폐업지원은 153ha에 254억여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피해보전 품목별 면적으로는 당근 5ha, 노지포도 422ha, 시설포도 364ha, 블루베리 312ha이다.

지역별 지원액은 순창이 13억여 원, 남원시 11억여 원, 고창군 9억여 원 등이다.

폐업지원 품목별 면적은 노지포도가 57ha, 시설포도 77ha, 블루베리 153ha이고, 지역별 지원액은 고창 75억여 원, 순창 61억여 원, 남원 59억여 원 순이다.

블루베리 폐업신청이 많은 이유는 아사이베리와 아로니아 등 다양한 베리류의 등장으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와 가격하락을 꼽았다.

폐업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올해 안에 폐업을 완료하고, 해당 읍·면·동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전국에서 폐업지원이 가장 많은 전북과 경북, 충북의 경우 중앙부처의 예산부족으로 폐원을 완료한 농가에게 지원금 중 올해 75%, 내년 25%를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폐업 농가가 현재 인기 작목으로 전환해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별화 전략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북도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9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일제 영치활동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이뤄지며, 백화점과 아파트 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이뤄진다.

번호판 영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이거나 과태료 체납 60일 경과 등의 차량이다. /뉴시스

'전주 항공대대 이전' 5개월 만에 공사 재개

'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지연됐던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사업'이 5개월 만에 본격 재개됐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공사 업체인 태영은 이날 오전 전주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 예정부지에 덤프트럭 10대와 포크레인 2대, 불도저 1대, 살수차 1대 등 공사장비를 투입해 토지 평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와 태영 측은 성토공사 등 기본부지 조성공사, 병영과 관제탑, 정비고, 활주로 등 시설 공사에 들어간 뒤 오는 2018년 말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사 재개는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이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사업계획승인 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재 기자

국가예산확보 국회방문 전북도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7일 송하진 도지사가 서울 국회를 방문하여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전북도의 국가예산 반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도, 구내식당 휴무확대로 경제 활성화 도모

월2회→월4회로 확대… 월 5000~6000만원 소비창출 효과 기대

전북도가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7일 도에 따르면 지역상권 살리기에 힘을 더하기 위해 이달부터 도청 구내식당의 휴무를 월2회(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서 월4회(매주 금요일)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지역 업체와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를 2008년부터 월1회, 2012년부터는 월2회로 정착 시행하고 있다.

구내식당 휴무 확대는 지난 9월 시행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청 주변 식당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번 구내식당 휴무확대 기간은 구내식당의 운영상황, 지역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청내 직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소비창출 효과는 한 달 기준 월 5,000~6,0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구내식당 휴무확대 운영을 통해 건전한 소비촉진과 지역 자영업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내 임야 '울창' 면적은 '감소'

임목축적량 10년 전보다 1.8배↑… 면적 감소추세 완화

전북도 임야가 울창해지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에 있는 나무총량(임목축적)이 10년전인 2005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산림청이 발표한 '2015년 산림기본통계' 조사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에 있는 임목축적은 6554만9000㎥으로 지난 2005년보다 2831만5000㎥이 증가했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ha당 평균 임목축적량은 147.92㎥로 10년(82.86㎥)전보다 약 1.8배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임야는 울창해지고 있는 반면, 산림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도내 산림면적은 44만3140ha로 2010년보다 3376ha가 감소했다.

주요 감소 원인은 공장(516ha), 농지(228ha), 도로(227ha), 대지(212ha) 전용에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는 10년 평균 1.06%보다 줄어든 0.75%로 완화됐다"면서도 "향후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 수요가 증가되는 등 산림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자원의 증대를 위해 도민 모두 풍요로운 숲을 가꾸는데 동참해야 한다"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예방과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주시 '자전거 시민 패트롤' 운영

연말부터… 불편·개선 사항 발굴·활성화 방안 제안

전주시가 자전거타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시 느끼는 불편사항과 개선사항을 스스로 발굴하는 '자전거 시민 패트롤'을 운영키로 했다.

시는 올 연말부터 자전거를 이용하는 전주시 33개 동 주민들이 출퇴근 시 또는 권역별 합동순찰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사항과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발굴·건의하는 자전거 시민 패트롤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각 동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 등 자전거 이용자나 자전거에 관심 있는 시민, 자전거 동호회원 등 50여명을 자전거시민패트롤 대원으로 선정, 권역별 합동순찰을 통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이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시민패트롤은 특히 자전거 이용시설의 불편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시에 제안하고, 자전거 보관소 및 대여소의 장소 선정,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노선 등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다. 또,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과 우수자치단체 현장견학, 자전거 시책 관련 워크숍 참여 등과 같은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시는 자전거 시민패트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대원들에게는 시장표창 추천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각 동별로 시민패트롤 대원 추천을 받고, 다음 달에는 발대식 및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자전거 시민 패트롤 운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시민패트롤 활동기간은 2년이다.

이와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에너지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걷는 도시 △빗물재이용 등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손꼽힌다.

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만성지구 등 신도시개발지구 주요도로 곳곳에 보도와 분리된 형태의 안전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시는 시민 생활 속 자전거 타기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016년 자전거대행진'과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기존 2곳에 불과하던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5개소로 늘리기도 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 자전거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자전거이용시설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라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통해 시민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